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목 차>

1.예방규정 작성 및 평가 대상 등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소방청	작 성 자	이름	정지원
	담당부서 (과)	위험물안전과		직급	소방경
	국장	권혁민		연락처	044-205-7482
	과장	박진수		이 메 일	mpss_aida2000 @mail.go.kr

2023. 07. 10.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예방규정 작성 및 평가 대상 등								
	2.규제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3.위임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인 제조소 등의 대규모 위험물시설은 화재 예방과 사고 대응에 관하여 사업장별 매뉴얼을 작성·보관하도록 하나, 그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가 없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예방규정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함								
	7.규제내용	○ 예방규정 작성 및 제출 대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소방청장에게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함 *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조소등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대상 : 3,579(출처 : 2023년 위험물 통계자료('22.12.기준), 소방청)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조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관계인</td><td>3,579개소</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조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관계인	3,579개소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조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관계인	3,579개소								
9.규제목표	○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대량으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작성된 예방규정에 대한 이행 실태 평가를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대량으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은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사고 예방을 위해 예방규정에 대해 정기적 평가를 통해 일반 국민의 안전사고예방에 따른 편익 발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	-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 7. (생략) <u><신설></u>	제15조(예방규정의 작성 및 평가의 대상인 제조소등) ① ----- -“ <u>대통령령으로</u>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1. ~ 7.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4항에서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u> ”이란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 가운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조소등을 말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최근 5개년 위험물시설 관련 사고는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상향 추세에 있음. 특히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을 저장 및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의 화재사고 등 발생시 국가경쟁력 및 국민 안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

- (최근 위험물 사고) 197억원^(18년) → 166억원^(19년) → 184억원^(20년) → 195억원^(21년) → 352억원^(22년)
 <제조소등별 위험물사고 현황(2023 위험물통계자료('22.12.기준), 소방청. '23.6.발간)>

구분	계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무허가시설	운반과정	지정수량미만	기타
계	343	61	6	23	5	11	-	33	4	-	49	-	3	39	30	13	56	10
2022년	80	15	1	7	2	3	-	5	-	-	7	-	-	14	11	1	8	6
2021년	66	12	1	4	1	1	-	11	-	-	11	-	1	6	4	2	12	-
2020년	61	8	2	2	1	-	-	6	2	-	9	-	2	7	6	4	12	-
2019년	64	16	1	3	1	4	-	3	1	-	16	-	-	6	2	1	9	1
2018년	72	10	1	7	-	3	-	8	1	-	6	-	-	6	7	5	15	3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시설 관련 주요사고>

옥외탱크저장소 사고('18.10.)	제조소 사고('18.9.)	제조소 사고('20.3.)
		
지정수량 : 24,500배 인명피해 : 없음 재산피해 : 77 억원	지정수량 : 9,000배 인명피해 : 경상 1명 재산피해 : 45억원	지정수량 : 63,739배 인명피해 : 중상 1명 경상 3명 재산피해 : 9.3억원

- 그러나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법에 의해 예방규정*을 작성·제출만 하고 있어 예방규정이 실제 이행되는지 확인 및 감독하기 어려운 않는 문제점이 있고

* 위험물 시설의 관계인이 해당 시설의 화재예방과 재해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하여 정해 놓은 자체 매뉴얼

- 예방규정 미제출에 관한 벌칙만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예방규정 제출 의무는 강제하지만, 이행은 의무만 있을 뿐 그에 따른 평가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예방규정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됨

* 벌칙사항 : 예방규정 또는 변경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1,500만원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예방규정 관련 벌칙조항〉

법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의무를 법에 규정
	내용	예방규정 제출대상 시설 중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함
규제대안2	대안명	예방규정 제출의무 폐지
	내용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화재예방 및 재해발생 조치 사항에 대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음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해당 관계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자율성 유지	○ 예방규정의 이행을 정기적 평가할 수 없고 안전관리를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일정수준 이상의 안전관리를 보장할 수 없는 등 안전관리 공백 발생

규제대안1	○ 제출 의무만 있는 예방규정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 관계인이 작성한 예방규정에 대한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안전관리 부담 증가
규제대안2	○ 예방규정의 작성·제출 및 이행에 대한 규제부담 없음	○ 위험물시설에 대한 화재대응 및 비상조치 부재로 인한 초동대응 불가로 피해 확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계기관 등	'23.4.17. ~ '23.4.27.(서면)	고용노동부 (표1 참조)	일부수용

<표1. 고용노동부 의견 및 검토결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창사는 국민의 나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수신 소방청장(위험물안전과장)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회신

1.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소방청 위험물안전과-2158, '23. 4. 17.)

2. 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불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검토의견서(고용노동부), 끝.



고용노동부장관

주무관 김배희 행정사무관 정재진

협조자

시행 규제개혁법무담당관-6144

주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여진동) / www.moel.go.kr

전화번호 044-202-7066 팩스번호 044-202-8023 / kth0201@korea.kr / 비공개(5)

규제개혁법무 전담 2023. 4. 28. 담당관 김배진

접수 위험물안전과-2425 (2023. 4. 2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의견 검토결과

(2023.5.1. 소방청)

개 정 안	수정안 ('23.4.28. 고용노동부)	사 유
제15조(예방규정의 작성 및 평가의 대상인 제조소등) ④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제15조(예방규정의 작성 및 평가의 대상인 제조소등) ④ (개정안과 같음)	○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을 위한 평가·점검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예방규정 작성 및 평가를 할 경우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음
1. ~ 7.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 가운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조소등을 말한다.	1. ~ 7. (개정안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 가운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조소등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설비는 제외한다.	○ 따라서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서 제외할이 타당함

<검토의견> 일부수용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이하 "예방규정 이행평가")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 평가제도(이하 "공정안전보고서 이행평가") 간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은 타당한 면이 있음.

○ 다만, 저물건의 중복규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 이행평가 대상 전부를 예방규정 이행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음.

- 알 저도의 입법목적은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유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평가를 실시할 실익이 있음. 즉, 평가대상이 아닌 평가항목에 대해 그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면제 여부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는 예방규정 이행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실시한 관련연구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에서 검토된 바 있음. 이를 반영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63조의2제2항 단서는 유사저도의 평가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 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음.

- 또한, 저물건의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이행평가 대상 전부를 예방규정 이행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예방규정 이행평가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우려가 높고, 이는 18년 대한승유관중사 화재의 후속대책(중리주제)으로 추진한 예방규정 이행평가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됨.

3. 규제목표

-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대규모 위험물제조소 등에서 작성한 예방규정에 관한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자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대상의 적정성> 예방규정 작성대상 전체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향은 적절하나, 규제 신설에 따른 피규제자 부담 해소 및 행정적 집행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선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예방규정 대상 중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위험물시설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적정함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저 기준량(예시: 휘발유 1 지정수량 = 200리터)

○ <기간의 적정성> 위험물제조소등 예방규정 평가 주기는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로 구분되며 최초평가는 예방규정 제출일로부터 2년내, 정기평가는 4년 주기로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고 하위 법령 개정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평가 등급에 따라 주기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타법(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가제도와 주기가 동일하여 기간은 적정함

* 평가점수에 따른 주기 차등안(가안)
1. 평가점수의 총합이 90점 이상인 경우(“1군”이라 한다) : 4년 이내
2. 평가점수의 총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2군”이라 한다) : 3년 이내
3. 평가점수의 총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3군”이라 한다) : 2년 이내
4. 평가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인 경우(“4군”이라 한다) : 1년 이내

○ <평가방법의 적정성> 기존 예방규정의 작성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평가하는 것이며 최근 1년내에 유사제도 평가를 받은 경우 중복항목*에 대해 평가를 면제할 예정이므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예정) 평가방법은 적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위험물시설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부분*이며 유사제도(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평가를 받은 경우 중복항목에 대한 평가를 면제할 예정이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예정)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예방규정에 대한 이행평가 도입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크지 않아 규제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관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검토 현황
(’18년 ~ ’23년 6월) : 중소기업 4.0%(전체 25개사 중 1개사)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산업소방안전
② 규제 방식		신고
③ 예비분석모델		예비분석표모델
	판단 근거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조소를 보유한 사업장은 대부분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며, 중소기업으로 판단되는 업종은 통계청 분류체계의 파이프라인 운송업, 기타 보관 및 창고업 총 2개 업종으로 2020년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기업현황 분포 파악 가능
④ 대상 업종		파이프라인 운송업, 기타 보관 및 창고업
⑤ 예비분석내용		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 ○ 규제대상 집단은 2개 업종 ○ 피규제집단 업종별 10인 미만의 소기업의 사업체수, 매출액 분포를 2020년 경제총조사 에서 파악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예비분석표>

	업종	전체 업체수	총 매출액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업체수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총매출액	상시근로자 10인미만 평균매출액
	파이프라인 운송업	15	144,479	-	14	144,479	10,320
	기타 보관 및 창고업	469	1,192,610	12,624	390	505,520	1,296
<p>② 지표값 산출 및 차등 점수 확인</p> <p>○ 파이프라인 운송업</p> <p>- 전체 대비 소기업 업체수 비율(%) = $(14/15) \times 100 = 93.0\%$, 0점</p> <p>- 전체 대비 소기업 매출액 비율(%) = $(144,479/144,479) \times 100 = 100\%$, 0점</p> <p>- 소기업 평균 매출액 대비 근로자수 100인 이상 기업 평균 매출액 비율 = $(0/10,320) = 0$, 0점</p> <p>○ 기타 보관 및 창고업</p> <p>- 전체 대비 소기업 업체수 비율(%) = $(390/469) \times 100 = 83.2\%$, 1점</p> <p>- 전체 대비 소기업 매출액 비율(%) = $(505,520/1,196,610) \times 100 = 42.4\%$, 0점</p> <p>- 소기업 평균 매출액 대비 근로자수 100인 이상 기업 평균 매출액 비율 = $(12,624.5/1,296) = 974$, 3점</p> <p>③ 예비분석표 적용</p> <p>○ 두 지표의 각각의 총점은 0점/4점으로 산업소방안전 - 신고 규제에 대한 차등화 적용 여부는 ‘차등화 배제(X)’ 또는 ‘차등화 불확실(△)’로 확인</p> <p>④차등화 대상 결정</p> <p>○ 예비분석 결과, 해당 규제는 ‘차등화 배제(X)’ 또는 ‘차등화 불확실(△) 대상으로 판단되며, 규제의 차등화 필요성은 없음</p>							
⑥ 차등화적용 여부	규제의 차등화 필요성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일몰설정 여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미국과 영국은 위험물질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법령과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예방규정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의 PSM 제도와 영국의 COMAH 제도는 국내 예방규정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며, 특히 영국의 COMAH 제도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검사·조사 등의 평가를 받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해외기준 비교표

구분	미국(PSM)	영국(COMAH)	일본(예방규정)
목적	○ 일정 기준수량 이상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공정안전관리제도 구축 및 준수	○ 위험물질 취급설비 등의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업주의무사항을 규정	○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가 예방규정을 작성 및 제출
기관 및 제도	○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 산업안전보건청 ○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 공정안전관리제도	○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 ※ 보건안전청 ○ COMAH(Control Of Major Accident Hazards) ※ 중대사고예방제도	○ 소방청 ○ 예방규정 ※ 국내제도와 유사함
근거	○ 29 CFR 1910.119. ※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 기준	○ COMAH PART2 ○ COMAH PART3 ○ COMAH Schedule 3 등	○ 소방법 제14조 ○ 총무성령 제9장 예방규정
주요 내용	○ 공정안전정보 ○ 공정위험분석(위험평가) ○ 운전절차 ○ 직원 교육 ○ 비상조치계획 등	○ 사업장 내 안전관리 방침 ○ 근로자의 참여방안 ○ 안전관리시스템의 사업주 의무사항 등	○ 안전관리담당자 및 조직 ○ 자체소방대 및 비상조치 ○ 종사자 교육 ○ 작업기준 및 운전절차 ○ 안전에 관한 기록 등
평가	○ 평가주기 : 5년 - 위험성평가 실시 ○ 별도의 기관으로부터 확인평가를 받는 제도는 없음	○ 평가주기 : 5년 - 안전보고서 검토 및 갱신 - 관할 기관의 검사·조사를 위한 필요정보 제공 ○ 자율적이고 간접적인 확인평가를 위한 법제도 시스템 구축	○ 평가주기 : 없음 - 지자체장이 화재예방을 위한 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함

○ 타법사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사고위험성과 피해를 예방하고 있음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목적	○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의 중대사고 예방	○ 사고대비물질 취급의 유해·위험사고 대비	○ 고압가스법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 준수여부 확인
기관 및 제도	○ 고용노동부 - 지방고용노동청장 등 ○ 공정안전보고서	○ 환경부 - 화학물질안전원 ○ 위해관리계획서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안전성향상계획서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위해 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
주요내용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 평가서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 그 밖의 공정상의 안전관 관련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 하는 사항	○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방제시설 및 장비현황 ○ 공정안전정보 및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교육훈련 등	○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기술 ○ 안전성평가 ○ 작업관리 ○ 교육훈련 ○ 사고조사 ○ 비사중치 등
평가	○ 신규평가 : 2년 이내 ○ 정기평가 : 4년 ○ 재평가 : 중대산업사고 발생 등	○ 최초점검 : 2년 ○ 정기점검 : 4년 ※ 이전 점검결과에 따라 6개월 ~ 3년 적용	○ 최초검사 : 6개월 ○ 정기검사 : 5년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현재 예방규정 제출대상 위험물시설의 총계는 12,735개소이며, 이 중 본 규제에 따라 평가대상인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대규모 위험물 시설은 3,579개소임. 이러한 시설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부분이며 유사제도(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평가를 받은 경우 중복항목에 대한 평가를 면제함에 따라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음

- 예방규정 제출 대상의 법적근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예방규정 제출대상(2023 위험물통계자료('22.12.기준), 소방청. '23.6.발간)>

구분	계 (개소)	제조소	일반 취급소	이송 취급소	옥외 저장소	옥내 저장소	옥외탱크 저장소	암반탱크 저장소
계	12,735	1,639	2,149	360	436	862	7,260	29

- 예방규정 평가 대상 :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제조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예방규정 평가대상(2023 위험물통계자료('22.12.기준), 소방청. '23.6.발간)>

구분	총계	공장				발전소	비축기지	저유소	기타
	(개소)	소계	정유사	화학공장	기타				
계	3,579	2,276	994	1,202	80	23	124	813	392
제조소	191	189	85	102	2	-	-	-	2
이송취급소	199	132	38	88	6	3	4	52	8
일반취급소	145	94	29	60	5	-	2	48	1
옥내저장소	63	44	-	32	12	-	-	-	19
옥외탱크저장소	2,843	1,798	841	905	52	20	89	694	242
옥외저장소	109	14	1	12	1	-	-	-	95
암반탱크저장소	29	-	-	-	-	-	29	-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원활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를 위해 관련 사항을 분야별* 구분하여 체계적 준비중이며, 제도 시행일('24.7.4.) 전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완료·적기시행으로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 제도분야 : 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 하위규정 입법('23.1.3. ~)

인력분야 : 평가제도 관련 운영인력 3명(소방령 1, 소방경 2) 배치 요구('23.2.14.)

기타분야 : 예방규정 표준안 작성, 실태조사, 홍보 등 준비단 운영('23.5.25. ~)

○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는 신규사무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 예산필요. 소요예산은 세부항목별(민간전문가 수당, 회의장 대관 등) 파악 후 시행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으며, 평가제도 시행시 재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18.10.7)의 후속대책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19.2.14, 국무총리 주재)
- 연구용역 「GHS 위험물 예방규정 확인평가제 도입 등 연구」('19.5.28.~'19.10.24., 소방청 주관)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령 개정 이후 하위고시 개정 및 예산안 마련 등을 통하여 운영

3. 종합결론

-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18.10.7)의 후속대책으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19.2.14, 국무총리 주재)이 마련되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일정 기간 마다 소방청장에게 평가를 받도록 하고자 제도운영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 다른 부처의 유사 제도 운영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해 현 예방규정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하는 등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함